

‘상습갑질’ 기업 과징금 2배 물리고, 담합 반복 시 영업정지

공정위, 하도급법·가맹사업법서
과징금 가중한도 최대 100% 상향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대·중소 간 힘의 불균형 해소 과제

정부가 대기업 원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배로 늘리는 한편,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약자인 ‘을(乙)’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과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보 비대칭 속에서 중소기업자와 가맹점주가 겪어온 고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습 위반 기업에 강력한 경고…과징금 가중 한도 100%로 일제히 상향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 질서를 반복적으로 어지럽히는 기업에 대한 처벌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뉴시스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분야 모두에서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배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 시장에서 상습적인 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하도급 시장에서는 중소 부품·제조업체들의 숙원이었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비용까지 확대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로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 변동률과 기준 지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급등한 공장 전기료나 가스비 부담을 대기업 원사업자가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마진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부실 공사 여파로 위기감이 고조된 건설 하도급 시장의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공사 금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 예외 사유(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등을 전면 삭제했다. 원사업자가 과산하더라도 중소 부품·건설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피해 수급사업자’도 다른 업체의 법 위반 증거를 최초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가맹 시장에서는 예비 창업자와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투명성’ 강화에 집중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및 가맹점수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3개월(분기별)로 대폭 단축해 시장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업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른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여부와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는 물론, 중도 폐업 시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까지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의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주경기 위원장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 역점… 담합 반복 시 등록취소 추진”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참석해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하여 엄중 조치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범위반역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별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와의 긴밀한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과징금 한도 상향은 공포 즉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일부 행정절차 조항은 올해 8월 4일 공포 즉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구축 속도

기후부, 실무협의체 착수회의 열어
공급선로 구축 신속처리 방안 논의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 대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공급선로 구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실무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기후부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한전이 호남권 반도체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해 ‘1단계 공급선로 적기 구축’을 골자로 마련한 잠정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잠정안을 구체화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밀착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첫 착수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전력공급 방안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1단계 공급선로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필수적인 지방정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역(지방)환경청의 인허가 협조 사항이 집중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사항 조율과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상시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본부 전력망정책과

를 비롯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대거 참석하며, 지방정부 측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과 도시계획과장, 광산구 및 장성군 건설·도시계획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한편에서는 전력계통부사장과 국가기간방건설실장이, 민간 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혁신팀장과 SK하이닉스 CR정책부사장, 설비인프라 부사장 등이 참석해 실무 조율에 나선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실무협의체는 기관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제거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익위, 복합민원 발생 시 즉각 기관 조율

‘적극행정국민신청’으로 지연 해결

공공기관 간의 책임 공방으로 장기간 방치되던 복합민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잇따라 해결됐다. 권익위는 이를 계기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해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기관 간 조율에 착수하는 등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행정기관이 얽혀 처리가 지연되던 복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과천시민광장 주변 도로의 차선규제봉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피해 보상 건이다. 해당 도로는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점용자인 과천시사관리소, 과천시 간의 관리 주체가 모호

해 5차례나 책임 논쟁만 반복되며 보상이 지연됐다. 그러나 권익위가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적극 조율한 결과, 과천시와 과천시관리소가 신속히 피해 보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철도 부지 내 위험 수목으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 민원도 해결됐다. 거대 수목으로 사유지 담장이 파손됐음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의 관리 규정이 불분명해 방치되던 건이다. 권익위의 조율로 세 기관은 다음 달까지 수목 제거를 완료하고, 차기 계약 시 관리 범위를 명문화하도록 ‘조경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처리기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관계기관 간 조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환경공단, AI로 ‘해파리 발생’ 감지

‘해파리 폴립 관리 플랫폼’ 구축 착수
안전사고 예방·산업 피해 감소 기대

해양환경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 해파리 폴립(초기 성장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해파리 대량 발생의 근본 원인인 폴립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탐지·관리하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까지 추진하는 국내외 최초의 사례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AI 기반 영상·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폴립 실시간

간 모니터링 및 자동 탐지·정량화 ▲GIS 기반 서식지 지도화 ▲정책 의사결정 지원 ▲발생·대응 시나리오 자동 생성 등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을 수중드론과 AI 분석 기반으로 전환해 조사 효율을 높이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어업·양식업·발전소 등 관련 산업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을 국가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고 대응체계를 강화



해양환경공단이 ‘AI 기반 해파리 폴립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환경공단

해 왔다. 공단 역시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 위탁으로 해파리 폴립 제거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잠수 인력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조사하는 방식은 넓은 해역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파리의 초기 성장단계인 폴립은 한 개체가 최대 5000마리의 성체로 증식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제거할 경우 성체 발생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K-스마트폰 유럽 점유율 확대 지원

1억 달러 규모 무역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우리 기업의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돕기 위해 1억 달러(약 8000만 유로)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 지원은 무보가수입자의 매입채무 유동화를 돕는 리버스 팩토링(Reverse Factoring) 방식을 도입해 수출 기업을 도운 첫 번째 사례다.

무보는 스페인 통신사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구조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은행)은 무보가 제공하는 무역보험을 담보로 삼아 수입자인 스페인 통신사의 대금 결제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자는 유동성 부담을 대폭 덜어내면서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제품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출 대금을 조기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보 측은 이번 지원이 최근 중국 등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스페인 모바일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지원사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